

한반도에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의 의미

남영호(신한대학교)

이제까지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과 상호교류는 평화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여겨지거나, 붕괴 위기에 처한 북한을 지탱해 오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는 일로 치부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접근과는 시각을 다소 달리해, 부의 공간적 집중이 진행 중인 신개발주의 시대 도시의 생존전략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초경계 네트워크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명사적으로도 도시는 초경계 네트워크로 시작되었으며, 동아시아의 경제개발도 도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세계 다른 곳보다 더 늦게까지 국민국가가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로막았지만, 최근 형성되는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몇몇 글로벌시티나 세계도시로 부와 자본이 집중되는 시대, 한반도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주제어: 한반도, 도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 동아시아

1. 서론

이 글은 남북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사업,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중국 단둥 등을 경유한 각종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여러 접촉과 왕래를 도시네트워크의 맹아라는 관점에서 이론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들 활동은 그간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통해 장차 통일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반대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오랜 동안 지체되었던 국민국가 단위를 넘는 생활권역의 구축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넘는 도시네트워크의 구축은 신개발주의 시대 도시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으며 오늘날 도시의 변화하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사용한 ‘초경계(trans-border) 도시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오늘날 빈번하게 진행 중인 지방정부 또는 도시 차원의 자매결연이나 공동행사, 상호협력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여기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국가나 문화, 이데올로기, 종교를 뛰어넘는 도시 간 연결망이 지속성을 지닌 공동의 생활권역을 형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현재 남북한 사이의 지방정부와 민간의 접촉 및 활동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전망으로서는 유용할 뿐 아니라, 현대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신개발주의 시대 공간적 양극화의 극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초경계(trans-border)’는 매우 다양한 함의를 지니지만, 남북관계에 서는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현재의 경계를 전제로, 그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행위가 공동의 생활권을 지향하는 관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경계는,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되, 역사적으로 형성된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체제의 산물인 경계의 성격 변화를 통해 평화공존을 내포하는 개념이 된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에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함께, 무엇보다 남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시민 단체, 지역주민 등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에서 주요한 행위자이다. 나중에 서술할 독일과 폴란드 경계 도시 괴틀리츠-즈고르젤레츠(Görlitz-Zgorzelec)와, 중국-대만의 양안 관계(cross-strait relations)에서 금문도의 사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신개발주의 시대 도시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현대 자본주의의 양극화 심화는 공간적으로는 몇몇 글로벌 시티(Global city)¹⁾ 또는 세계도시 네트워크(World city network)²⁾로 자본축적이 집중되는 경향을 낳는다.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글로벌 시티로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을 꼽는데, 이들 도시에는 다국적 생산 자본의 본사, 대형 금융회사, 각종 서비스 회사가 집중되는 반면, 주변 지역은 자원을 이들 도시에 착취당하는 일종의 배수지로 전락한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도시이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도시나 세계도시에 미달하는 베타 도시(β -World City)에 불과하다(Taylor, 2000: 5~32).³⁾ 부의 공간적 집중이라는 일반적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네트워크 또는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 글로벌 도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쓰인 도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마크 고트디너와 레슬리 버드의

1)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 Peter Taylor and Ben Derudder, *World City Network: A Global Urban Analysis*(London: Routledge, 2004).

3) Peter Taylor, "World cities and territorial states under conditions of contemporary globalization," *Political Geography*, Vol.19(2000), pp.5~32.

주장에 기대어 다중심 대도시권(Multi-centered Metropolitan region)을 도시라 통칭하기로 한다.⁴⁾ 이들은 2차 대전 이후 도시와 교외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중심 대도시권이라는 용어로 이 변화를 설명한다. 대도시 권역에서는 중심지의 분화에 따라 교외에도 편의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 제조업체가 분포하기도 하며,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혼재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외에 거주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많은 인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단일 중심지가 한때 독점했던 기능들, 즉 소비 기능, 사무 기능, 제조업, 주거 생활, 오락이나 휴양 활동도 도시 권역 내의 여러 중심지로 분산되고 또 각각의 중심지는 몇몇 기능으로 특화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중심 대도시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화 정도가 높은 동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도시’는 특정 지역의 몇몇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한 일종의 벨트를 지칭한다.

2. 신개발주의 시대의 도시 네트워크

1980년대에 들어서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마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여기서는 맥락에 따라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

4) 마크 고트디너(Mark Gottdiener)·레슬리 버드(Leslie Budd), 『도시연구의 주요개념』 (서울: 라움, 2013), 147~153쪽.

하려 한다.⁵⁾ 지구적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념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 정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쥐고 있으며 이 영향력을 기업의 활동을 공간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도 사용한다.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의 유치, 공단과 사회기반시설의 조성, 이를 위한 토지의 수용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또 정부는 자국 내 거대도시를 세계적 명성을 갖는 글로벌 시티 또는 세계도시로 키워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글로벌 시티(global city)는 하이테크 산업, 문화시설, 기념비적 건축물 등을 갖추어 고급인력을 끌어오는 매력을 지닌 공간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들어와 제도적·산업적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 고용된 전문직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이다.

한국에서 신개발주의로의 이러한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방식으로 도입되지만, 그 이전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조류에 따라 공간의 지구화와 기업화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 제조업의 이점이 감소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의 혜택을 보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필두로 차례차례 저임금 수출주도경제의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산을 관리할

5) 마이크 더글러스(Mike Douglass), “동아시아 지역 내 지구화되는 도시와 경제초월 도시 네트워크: 부산-후쿠오카 ‘공동생활구역’ 사례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2호(2011), 19~20쪽. 이 글에서 마이크 더글러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신개발주의라 지칭하는 이유는, 국가가 케인스주의적 공간관리 없이 자신의 주도하에 영토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밖에 없었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생산비를 낮추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기업은 다국적화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기업은 굳이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서 경제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보다 본사와 생산공장, 관련서비스의 최적지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하게 된다.

어떤 도시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체의 본사 유치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체를 둘러싸고 대형 금융회사, 법률서비스 업체, 회계법인, 전산 서비스회사 등이 모여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 기업체에 고용된 전문직과 사무직을 위해 고급 주택과 주택 서비스업체, 높은 수준의 의료 및 교육 시설, 대학과 연구소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구매력과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확보되면 공연장, 박물관, 레스토랑, 여러 종류의 예술가 집단 등도 모이게 된다. 물론 이는 순차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상호순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사회경제적·문화적 기반시설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이라 여겨지는 곳에 다국적 기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체가 들어오기도 한다. 물론 이 도시에도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이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간은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공간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다수의 인구를 위한 공간으로 분할된다.⁶⁾

사스키아 사센과 피터 테일러는 이렇게 다국적 기업체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상하이 같은 몇몇 곳에 국한된다고 지적한다.⁷⁾ 이러한 글로벌 시티(global

6)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공간과 비판사회이론』(서울: 시각과 언어, 1997), 241~276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통해 도시공간이 계급적으로 재분할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city) 또는 세계 도시(world cities)는 부가 집중되는 공간인 반면, 여타의 지역은 이들 자본 축적 중심지의 배후지역으로 부를 유출당하는 공간이 된다. 부는 지구적 차원에서 공간적으로 분할될 뿐 아니라,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서 또 심지어 글로벌 시티 안에서도 공간적으로 분할된다. 자본의 다국적화와 이의 공간적 전개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힘은 국민국가를 능가하기도 한다. 도시들은 저마다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두고 경쟁하며 이의 유치를 위해 제도와 공간을 정비한다. 여기서 국민국가보다 도시 또는 지방정부가 서로 다국적기업 유치의 경쟁상대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경쟁은 평생고용 관행의 폐지, 생산비 감소 노력, 외국인 노동력의 적극적 도입, 비정규직 확대 등의 고용 노동환경의 변화를 낳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울은 이러한 글로벌 시티나 세계도시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순위인 중위 세계도시, 또는 베타 세계도시 수준의 서열에 속한다. 세계도시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원을 흡수하고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지만, 그만큼 역량을 가지지 못한 중위 세계도시는 일국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세계도시보다 자국의 사회적 자원을 더욱 많이 빼어들인다.⁸⁾ 전병유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역외소득 유출입의 누적규모와 공간적 흐름(2000-2014)”에 따르면, 서울은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571조 370억 원을 수취하는 반면, 광역도 가운데 여덟 곳

7) Sassen, *The Global city*, pp.4~5; Peter Taylor and Ben Derudder, *World City Network: A Global Urban Analysis*.

8) 김종엽, “지구적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교육개혁의 길,” 『창작과비평』, 가을호(2016), 101쪽.

은 947조 3170억 원을 유출당한다. 경기도는 순수입 광역도이지만, 도내의 지역별 편차가 크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순수출일 것으로 추정된다.⁹⁾

전 지구적으로 부가 공간적으로 양극화되어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고, 도시 사이의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것은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 때문이다. 마이클 피터 스미스는 사스키아 사센, 피터 테일러 등의 이러한 논의가 자본의 운동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경제주의적 입장이며, 인종, 종교, 젠더 등 사회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무시하는 정태적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자본의 운동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경제적인 관점에서 서더라도 지구적으로 부여된 도시의 서열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피터 스미스는 이러한 경제주의적 입장은 데이비드 하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국적 도시이론의 사이트들인 지역의 문화적 공간들은 또한 프리드먼과 하비가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덜 정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적인 질서체계를 향한 지향은 아무런 성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존재’나 ‘공동체’의 정태적인 존재론을 반영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지역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동학적인 구성물들이다. 지역들은 복합적으로 굴절된 경제적인 흐름, 프로젝트, 실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결합의 사이트들이다. 지역들의 끊임 없는 형성과 재형성에 침투해 들어가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과정들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그래서 초국적 도시성을 구성하는 경쟁하는 공간적

9) 전병유 엮음, 『한국의 불평등 2016』, 103~139쪽.

실천과 문화적 갈등을 낳는 현실의 정치적인 투쟁들에 앞서 도시의 발전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¹⁰⁾

스미스는 글로벌시티 명제나 세계도시론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도시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자(actor)의 움직임이며 자본의 일방적인 축적논리만으로는 도시의 사회문화적·종족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사회경제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에 따라 경제적 부침을 거듭하며 종족적(ethnic) 구성을 달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전 지구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운동뿐 아니라 풀뿌리에서 움직이며 자본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한 것(the global)과 지역적인(the local)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도시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그가 너무 남용되어 이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지구화(globalization)’이라는 용어 대신 ‘초국적 도시론(transnational urbanism)’을 제안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서는 자본뿐 아니라 사람의 활발한 운동이 도시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끊임없이 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 때문이다. 이 논문의 용어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위에서 인용한 마이크 더글러스의 논문에서 나온 것이지만, 스미스의 문제의식을 상당 정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미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리프 딜릭은 글로벌시티나 세계도시론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국민국가를 넘어서 더 나은 세계가 열리고 있는 듯한 일종의 유토피아의 환상에서 못

10) 마이클 피터 스미스(Michael Peter Smith), 『초국적 도시이론』(서울: 한울, 2010), 102쪽.

벗어났다고 비판한다. 스미스의 분석은 주로 발전한 선진자본주의 나라의 도시에 국한된 것이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이주는 제3세계 내에서 더욱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세계 내에서 또 한 국가 안에서 도시와 배후지역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주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지 못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의 초국적인 이주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낭만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리프 달릭의 비판이다.¹¹⁾

아리프 달릭의 비판은 오히려 우리의 논의에서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도시와 배후지역의 급격한 변화와 이주, 그리고 경계를 넘는 사람과 물자, 자원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진행 중인 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그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농민의 도시 하층계급 전환, 만성적 식량 부족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농업생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재배치(재분배로 번역되어 있음)가 초래하는 생태적 결과, 거버넌스의 문제 및 막대한 거대도시들에서의 인구 집중의 심리적 비용, …… 인구의 감시 강화, 발생가능한 도시 무질서의 예측과 관련된 억압 기제(도구로 번역되어 있음)의 확산,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가 인구들의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놓고 벌이는 과열화된 경쟁 등을 이미 초래해 왔다”고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기를 한다.¹²⁾ 아리프 달릭의 비판처럼 초국적(transnational) 이주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또 배후지역에는 아직도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

11) 아리프 달릭, “초국주의의 이론과 실천: 활용, 오용, 남용,” 『도시인문학연구』, 제2권 2호(2010), 9~34쪽. 달릭의 논문에서 비판의 초점은 스미스가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여타의 문화적인 투쟁과 병치했다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생략한다.

12) 위의 글, 27~28쪽.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 초경계 네트워크의 역동성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초경계 도시네트워크와 아시아

부의 공간적 집중과 도시의 서열화가 정태적이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은 글로벌시티에 대해 살아남기 위한 다른 지역 또는 도시들의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세계도시의 반열에 오른 싱가포르가 선도적으로 초국경 네트워크에 나섰다.¹³⁾ 1989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Johor Baru),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섬(Riau Island) 일부로 구성된 시조리 성장 삼각지대(Sijori Growth Triangle)를 만드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 이후 인도네시아의 메단(Medan)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남부, 태국 남부를 잇는 초국경 네트워크,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메콩강 경제벨트, 중국의 선진,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주장 삼각주 경제구역 등이 잇달아 형성되었다.

하지만 세계도시인 싱가포르를 끼고 있는 시조리 성장 삼각지대를 제외한다면 초경계 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주장 삼각주 경제구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지만,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효과보다는 홍콩이나 마카오로의 이주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 초국경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의 의의는 적지 않다. 식민지배와 식민

13) 마이크 더글러스, “동아시아 지역 내 지구화되는 도시와 경제초월 도시 네트워크,” 21~23쪽.

열강에 의한 경계의 붕괴의 역사를 겪은 뒤 독립 이후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매진하면서 잊혀졌던 초경계 도시네트워크가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국민국가 간의 경계는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반면, 특히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인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인 야콥은 장거리 도시 간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도시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당연히도 국민국가의 탄생보다 훨씬 전이었다고 설명한다.¹⁴⁾ 사실 도시 간 네트워크는 도시가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다. 역사상 최초의 도시로 믿어지는 터키의 카타르 후욕은 도시 간 네트워크로 나일강과 흑해까지 연결되었고, 고전 시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도 도시네트워크의 연합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기원후 100년경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과 연결되었다. 왕조의 흥망, 봉건 귀족 사이의 연합과 전쟁, 제국의 등장과 같은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 네트워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도시 간 네트워크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계기는 18세기 이래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출현이다. 국민국가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주권(sov^ereignty)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서로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적 체제이다. 국민국가 체제에서 도시 간 네트워크는 국경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도시 간 연결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한때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던 통상과 문화적·종교적 교류는 이제 국가의 승인 아래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여전히 왕조 국가를 유지했던 동아시아는 19세기 중반 이래

14) Jane Jacobs, "Cities First-Rural Development Later," *The Economy of Cities*(New York: Random House, 1969), pp.3~48.

식민주의의 침략을 겪으며 초경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 1842년 체결된 난징조약을 시작으로 중국은 80개가 넘는 치외법권 항구와, 조차지, 식민지를 서구열강과 일본에게 넘겨준다. 영토적 경계의 붕괴는 1895년 일본의 대만 합병,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어져 아시아 도시의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이 시기 네트워크란 식민지와 식민지 본국 사이의 관계이거나 자신의 영토성(territoriality)을 부정당한 채 자원과 인구의 일방적인 이동을 뜻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정은 순수 경제적 과정이나 자본 축적의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정치적 억압, 문화적 왜곡, 국가 제도의 근대화화 식민화, 국민 의식의 내면화와 같은 총체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동아시아가 근대세계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사회로의 전략’이라는 ‘종속’과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자기변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길은 동시에 전자를 동반하는 길이었고, 동아시아의 역사세계 속에서 중화의 위성국이었던 일본과 조선은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의 역사를 견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민국가로서의 메이지국가의 성립이 국민과 국가를 잇는 하이픈을 이콜로 전환시키는(주: nation과 state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국민국가, 즉 nation-state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가리킴) 갖가지 국민형성과 국민화를 위한 제도나 장치, 이데올로기 등을 발견하고 창조해가는 국내지향적인 과정에 머물지 않고, 지정학적인 ‘타자’에 대한 심상지리의 발견이나 날조가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즉 국민국가의 경계 확정과 지정학적인 대립은 지도상의 문제나 물리적인 성격에 그치지 않고 서로 대치하는 이미지나 상상력 사이의 항쟁이며, 내서널리즘에 의해 이상화된 ‘자기’와 ‘야만적인’ ‘타자’,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담론공간의 경

계를 둘러싼 지배와 저항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⁵⁾

이 글에서 논의하는 초경계 네트워크는, 마이클 피터 스미스의 지적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으로 건설되는 것도 아니며 또 경제적인 이윤의 추구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위에 인용한 강상중의 언급처럼 동아시아 내부에서 존재하는 이상화된 자기와 야만적인 타자의 이분법을 넘어서 식민지의 유산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남한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불완전한 자기’와 ‘야만적인 타자’의 불완전한 이분법으로 표상될 수 있을 듯하다. 이는 물론 식민지 시대에 이은 체제 사이의 대립이 여전히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동아시아는 인구의 급증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국민국가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기에 초경계 도시네트워크의 역사는 잊혀진 과거가 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까지 빛의 길을 걸어간 일본을 제외한다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이제야 영토, 주권, 국민이라는 국민국가의 3대 요소를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국민국가는 정치, 소득, 회계, 영토,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타자와 자기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전제였다. 세계은행, IMF,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으며 동아시아의 각국은 ‘국가 발전’이라는 지상 과제를 향해 질주했으며 도시계획 또한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다. 도시정책은 항상 국가의 영토 안에 제한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했고 국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아시아는 새로운

15) 강상중,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장지리를 넘어서,’” 『공간: 아시아를 묻는다』(서울: 한울, 2007), 95~96쪽.

국제 노동분업에 힘입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룩했으며, ‘국가 발전’의 과제도 상당한 정도로 성취하였다.

일본이 이 시기 동안 전후의 폐허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였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했던 간사이(關西) 지방을 대신해 도쿄에서 오사카에 이르는 도카이도(東海道)의 태평양 벨트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였다. 2000년 무렵에는 인구의 과반수가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거점이 되었다. 남한은 이보다 뒤늦게 한국전쟁 이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잇는 도시회랑이 급속한 산업화의 거점이 되었다. 부산과 동남연안이 수출입 항구로서 운송능력이 낮다는 이점도 이러한 도시회랑의 형성의 지리적 배경이었다. 대만도 북으로는 타이베이에서 남으로는 가오싱 항구를 잇는 도시회랑이 급속한 산업화의 터전이었다.¹⁶⁾ 반면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북한과 중국은 이와는 다른 방식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나아갔다.

요약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 동아시아의 각국은 국민국가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압축적으로 달성하고자 했고, 198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소위 호랑이 경제(Tiger Economies)로 불리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국가 주도형 경제성장의 성취는 국가 간 경계(남한-북한과 중국-대만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적 경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할 만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초경계 도시네트워크는 잊혀졌고, 그 대신 국가 내의 도시회랑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참화를 복구하는 과정이 유럽연

16) 마이크 더글러스, “동아시아 지역 내 지구화되는 도시와 경계초월 도시 네트워크,” 15~18쪽.

합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나아간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그 반대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함께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3년에 걸친 한국전쟁과 국공내전 이후에도 1980년까지 진행된 중국-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이데올로기적·정치군사적 대립의 본보기였다.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과제의 추구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변영이라는 다른 한편에, 상호적대적인 관계의 지속이라는 그림자가 깔려 있는 동아시아에 선불리 유럽적 통합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강상중이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내의 갈등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더해 여전히 작동 중인 식민지 시대 형성된 ‘심상지리’의 작용이며, 일본이 스스로를 아시아 바깥에서 아시아를 타자화하는 입장을 정치적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계발해 온 영향이 크다.¹⁷⁾ 다른 한편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각기 정권의 정당성(legitimacy)을 (반)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대 체제의 부정에 두고 있다. 이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상호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미미했고, 소련 또는 미국·서유럽과의 동맹이 더 긴요하게 여겨졌다. 1964년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 1965년 한일 수교협정의 체결, 1971년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선임 등의 사건을 통해 비로소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관계,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국

17) 강상중,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상지리를 넘어서,” 92~114쪽. 강상중은 일본의 조선과 중국에 대한 모멸적인 태도는 식민주의 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식민주의를 거치며 변형, 발전되었다고 서술한다.

민국가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991년 남북한은 UN 동시 가입으로 국제적으로는 별도의 국민국가로 인정되었지만, 같은 해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양자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1991년 이전이든 이후든,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전개되든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자체로 완전한 국민국가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양자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를 완전한 국민국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게다가 중국은 대만을 유엔 회원국에서 축출했으면서도, 남북한과는 달리 이 둘 사이에는, 1992년 이래 초경계적 네트워크가 해가 갈수록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 양안관계(cross-strait relations)의 발전은 남북한 관계와도 대비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가까운 과거와도 대비된다. 1949년 국민당은 국공내전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났지만, 그 이후에도 군사적 대립은 지속되었다. 1958년에는 대만의 영토이나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섬 금문도에서 44일간 전투를 벌여 군인과 민간인 3,200여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그 이후에도 20여 년간 간헐적인 군사적 충돌과, 전단 살포 및 상호비방 방송 등의 심리전을 계속했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이 몇 년에 걸친 협상 끝에 수교하면서야 금문도의 군사적 충돌이 멈추게 되었다.¹⁸⁾

1980년대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무력통일 대신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양안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의했지만, 대만 정부

18) 한우석, “전쟁터에서 평화의 섬으로, 대만 금문도,” 『국토』 통권 308호(2011), 109쪽.

는 이를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간주해 일축하였다. 1980년대 말, 1949년 이래 계엄령하에 일당통치를 해왔던 대만의 국민당 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민주화가 진행되자 양안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국토를 수복한다는 그 전까지의 국시(國是) 대신, 내부적으로 “독립이나, 통일이냐, 현상유지냐를 둘러싼 대립이 정치적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결국) 고조된 양안의 군사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소삼통(小三通)을 적극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양안관계는 결과적으로 진전했다.”¹⁹⁾ 소삼통이란 통우(通郵), 통항(通航), 통상(通商)의 세 가지인데, 통우는 우편 및 통신의 교환, 통항은 배와 항공기의 상호운항, 통상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을 뜻한다.

소삼통으로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는 1992년 반관반민 기구인 중국의 해협회와 대만의 해기회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공유하면서도 그 중국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각자에 맡기기로 선언한 소위 ‘92공식’이다. ‘92공식’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과 대만이 서로를 완전한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넘는 상호교류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한 점이다. 현재 매일 150여편의 항공기가 대만에서 중국 대륙의 각지로 운항하며, 300여 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매년 대만을 찾고 있다. 중국 대륙을 마주보는 최전선으로 한때 10만여 명의 군인이 주둔했던 금문도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개발해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던 금문도(金門島)와 마주한 대륙의 샤먼(하문; 廈門)은 다시 진사(金廈生活圈)로 복원되었다. 거리가 먼 대만 본국보다 가까운 대륙의 샤먼과의 교류가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관광이나

19) 박명규, “양안에서 바라본 통일과 평화,”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서울: 진인진, 2016), 23쪽.

경제활동 이외에도 학업, 친척 간의 상호 방문 등을 위해 중국 대륙을 자주 찾고 있다.²⁰⁾

그렇다면 남북한 사이에도 체제의 상이함을 전제하면서도 체제의 상이함을 넘는 도시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2005년 개성공단 입주는 초경계 도시네트워크가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개성공단(개성경제특구)의 성격은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는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한이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접촉하며 형성한 네트워크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자신의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을 양도함으로서 형성된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여전히 남북한은 서로를 적대하며 상대의 부정을 자신의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관계로 남아 있어, 상호 간 초경계 네트워크의 형성을 막았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교류에도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원래 아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 자신의 외부 세계를 막연하게 낮추어 부르는 것에서 유래했기에, 이 단어 자체를 자신의 집단 정체성의 일부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²¹⁾ 서양에서는 “배제된 것의 집합”이며, 타자에 대한 통칭인 아시아는,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신개발주의 시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는 중층적인

20) 우권광(吳俊芳), “소삼통 이후 ‘진사생활권’의 복원,”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서울: 진인진, 2016), 223~251쪽.

21)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여러 아시아』(서울: 울력, 2011), 317~320쪽.

정체성의 하나로, “하나의 필수적인 불가능성”²²⁾이 되지 않을까.

4. 영토와 경계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주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례이다. 지리학자 이승욱은, 인류학자 아이와 옹(Aihwa Ong)이 경제특구를 주권이 영토에 균일하게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공간(spaces of exception)으로 규정한 데 착안해, 개성공단 역시 그런 점에서 예외공간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경제특구가 신자유주의의 기제 아래 주권의 차별적 적용 및 시민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개성공단의 작동원리는 이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²³⁾ 경제특구는 다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제공 및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노동과 환경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는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다. 개성공단이 예외공간인 것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에 남한 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한반도 지정학 질서로부터 예외공간일 뿐 아니라 이런 분단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 즉 남북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²⁴⁾

박배균은 동아시아의 경제특구를 발전주의적 특구, 신자유주의적

22) 위의 책, 325쪽.

23) 이승욱,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제26권 2호(2016), 138~139쪽.

24) 위의 글, 140쪽.

특구, 체제전환형 특구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특구는 세 번째 체제전환형 특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²⁵⁾ 다국적 또는 국내 자본을 유치해, 노동에 대한 억압을 무릅쓰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경제특구가 신자유주의적 특구라도, 모든 경제특구를 신자유주의의 합리성으로 환원해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경제특구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1644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근대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영토에 대한 주권의 배타적인 적용에 대한 예외가 많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해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이러한 배타성이 맞닿은 국경은 인구와 물자, 문화의 이동을 제한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각각의 영토 내부에는 특정한 방식의 규제, 질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이들을 규율하는 것이 정치였다. 특정한 지역이 한 국가의 영토라는 의미는,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인구와 존재하는 재산 역시 그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뜻했다. 하지만 초국가적인 정치와 자본, 인구의 움직임이 감지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도 영토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흐름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곧 설명할 독일과 폴란드 접경도시 괴를리츠-즈고르젤레츠(Görlitz-Zgorzelec)의 사례처럼 유럽에서도 국경은 중첩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며 영토의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이 제시한 국민국가와 영토, 주권의 문제는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 없으며 주권은 영토에서 균일하게 구현되기보다 다른 여러 힘과 만나며 굴절되거나 유연하게 행사되어 왔다.

25) 박배균,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 2호(2017), 303~306쪽.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특정한 정치지리적 환경에서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예외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힘들의 상호작용에서 주권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사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외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토는 장소의 특수한 한 형태로서, 특히 장소를 구성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권력투쟁의 과정 속에서 특정 세력이 장소에 경계를 만들어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 경계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 특정한 성질, 의미, 가치, 권력관계를 강압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²⁶⁾하기 때문이다.

장소의 배타성이 극도로 심화되어 발생한 것이 영토인 반면,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를 둘러싼 권력관계와 사회적 과정이 변화하면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브렉시트(Brexit)와 각국의 극우파 득세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EU)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가입국은 국민국가를 해체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주권 일부를 양도하고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의 성격을 변화시켜 이동과 흐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토성과 이동성이 교차하는 접경지역은 이동과 연결을 지향하는 흐름과 이를 차단하는 힘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국민국가의 영토란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경선을 획정하고 이를 선언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영토의 실질적 수호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국경선을 방위하는 군사력, 영토 내부를 잇는 교통망의 건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교육과 대중매체의 전파를 위한 역량 등이 모두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토란 국민국가 내에서 여러

26) 박배균, “동아시아 접경지역 경제특구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2016).

사회적 활동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의 재생산이 보장될 때에 실질적인 효과를 획득한다. 이 네트워크는 자신의 영토를 넘어서 확장을 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영토 안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받아들여 사회적 활동의 일부를 보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움직임은 영도화와 탈영도화의 복합이며, 이를 통해 경계의 의미와 접경지역의 현실을 (재)규정한다.

접경지역에서 형성되는 경제특구는 경제의 초경계적 이동과 교류를 허용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경제특구에서 주권은 영토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 인구의 이동과 교류를 허용하지만, 주권의 전면적인 포기에는 이르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권은 예외를 허용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한계공간(marginalized spaces) 또는 예외공간(spaces of exception)이지만, 한계공간이 반드시 경제특구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초경계 도시네트워크 속에서 연장될 수도 있다.

물론 예외공간화와 초경계 네트워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금문도에서 보이듯, 외부 자본에 의한 새로운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 또는 기존 문화적 가치와의 충돌이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양안무역은 2003년에는 500억 달러, 2013년에는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양안관계에서 항상적으로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계속 증가해 2007년 21.9%로 압도적인 반면, 경제규모가 큰 중국의 대만무역의존도는 2007년 4.7%로 감소했다. “이 대조적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중국은 대만의 시장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의 시장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김민환과 정현욱은 2014년 대학생들의 사상초유의 입법원 점거로 시작되어 수십만 명의 가두시위로 이어진 ‘해바라기 학생운동’의 배경에 대만이 중국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을 설명한다.²⁸⁾ 당시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었지만, 그 이전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체결되었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효과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이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강한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개발주의 노선을 취해왔지만, 양안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경제구조도 변화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OEM업체로 전략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하위에 위치하게 된 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기회를 잡은 몇몇은 대규모로 기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 대만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중국 노동자들이 진출한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결국 양안관계의 강화는 대만 내부의 계급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장차 한반도에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폴란드 접경도시인 괴를리츠-즈고르젤레츠(Görlitz-Zgorzelec)는 영토성과 이동성이 가지는 양면성과 복잡성을 말해 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²⁹⁾ 독일과 폴란드, 체코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 일대는

27) 정은미, “삼통으로 본 양안과 남북,”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서울: 진인진, 2016), 303쪽.

28) 김민환·정현욱,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제21권 3호(2014).

29) 니콜라이 토이플, “역사의 상처에서 새로운 유럽의 실험장으로: 독일-폴란드

여러 민족이 섞여 거주하면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재구성을 거치며 국경선의 변경도 잦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십자군 전쟁 때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두고 주로 독일인들로 구성된 튜턴 기사단이 14세기에는 이 일대를 장악했지만, 그 이후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군에게 패배해 이 일대는 폴란드인의 판도가 되었다. 17세기 30년 전쟁을 겪은 뒤에는 폴란드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지만, 1815년 이후 프로이센에 병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알타회담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폴란드와 독일이 맞닿아 있는 영토의 재조정이 실시되어 오늘날의 독일과 폴란드에 살았던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대규모로 강제이주 당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하나였던 괴를리츠와 프랑크푸르트, 구벤 등의 도시는 각각 둘로 분할되어, 괴를리츠시는 독일의 괴를리츠 시와 폴란드의 즈고젤리츠 시로 나누어진다. 비록 동독(독일민주공화국)과 폴란드인민공화국은 체제를 같이하는 사회주의 자매국가였지만 새로운 폴란드-독일 국경은 제2의 철의 장막으로 불리면서 1970년대까지 상호접촉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이는 튜턴 기사단, 프로이센 제국, 폴란드의 분할 등의 사건을 통해 폴란드인과 독일인의 거주지가 상당히 겹치는 가운데 민족 간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2년에야 양국 정부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독 정부는 폴란드인을 공장노동자로 받아들였으며 바터제를 통한 교환과 거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 자유노조 운동이 거세지자 동독정부는 다시 국경을 폐쇄하였고 접촉을 극히 제한하였다.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독일 통일 이후 폴란

사례로 보는 ‘두 개의 한국,’ 『신한대학교 탈분단경제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2016).

드와 독일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고 폴란드의 EU 가입 후 2011년에 비로소 노동력의 완전한 이동을 보장했고 시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이 인정되었다.

정부 차원과 EU 차원의 점진적이지만 획기적인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사를 배워왔으며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양 영토가 만나는 접경지대에서 화해와 통합은 지방정부와 시민 차원의 노력이 필요로 한다. 각각 55,000명과 31,000명의 인구를 가진 독일의 괴를리츠와 폴란드의 즈고르젤리츠는 한때 번영했던 역사도 있지만 국경선의 재확정과 도시의 분할 이후 수만 명의 사람이 떠나가면서 침체가 계속되었다. 경제적 침체와 종교적·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이 두 도시는 “유럽의 도시(European City) 괴를리츠-즈고르젤레츠”를 선언하며, 유럽의 도시 구상은 “지방자치 수준에서 문화, 교육, 경제 영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의 문화권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고 밝혔다. 그 뒤 2000년에는, 당시까지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가입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U에 의해 “유럽의 문화수도”에 선정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도시이지만, 영토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할된 현실 때문에, 이 두 도시는 협치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양 도시의 시민은 소비자로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 학생들은 매일 국경을 넘어 통학하기도 하고 박물관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 특히 괴를리츠의 몇몇 학교는 두 개의 언어로 수업하며 예술 교육에 강점이 있기에 폴란드 즈고르젤레츠의 시민들이 자녀들을 보내기도 한다. 지리학자 니콜라이 토이플의 심층면담과 현지 조사 결과, 현재 두 도시의 시민들은 하나의

도시라는 관점을 가지기보다는 1945년 탄생한 자신들의 도시에 강한 정체성을 느끼고 자신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³⁰⁾ 이는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영토로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에, 경계의 인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받으면서 이질성을 인정하고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사례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초경계 도시네트워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는 글로벌 도시나 세계도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지구적 공간의 양극화와 서열화에 대항하는 지구책으로서의 의미이다. 동아시아에서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양안관계처럼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다. 남북한의 네트워크는 양안관계처럼 서로에게 경제에 활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둘째 1945년 이래 이질적인 체제 아래에서 다른 역사를 배워왔으며 대규모의 전쟁까지 경험한 남북한에서 공존과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다. 괴를리츠-즈고르젤레츠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인구의 직접적이며 자유로운 교류·접촉과 함께 공동의 교육, 상대의 역사적 관점에 대한 이해, 경계를 넘나드는 경제활동 등이 밑으로부터 진행되어야 상호적대적인 관계가 서서히 해소된다는 점이다.

30) 위의 글.

한반도에서 초경계 도시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경계 허물기를 목표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경계의 존속을 상호이질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 이동과 흐름을 촉발하도록, 현재 경계의 성격 변화를 추구한다. 양안관계의 개선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했듯이 한반도에서 경계의 성격 변화와 초경계적 공존은 동아시아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 접수: 5월 26일 / 수정: 6월 9일 / 채택: 6월 16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고트디너, 마크(Mark Gottdiener)·레슬리 버드(Leslie Budd), 『도시연구의 주요개념』, 남영호·채윤하 옮김(서울: 라움, 2013).

소자, 에드워드(Edward Soja),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옮김(서울: 시각과 언어, 1997).

스미스, 마이클 피터(Michael Peter Smith), 『초국적 도시이론』(서울: 한울, 2010).

스피박, 가야트리(Gayatri Spivak), 『다른 여러 아시아』, 태혜숙 옮김(서울: 울력, 2011).

전병유 엮음, 『한국의 불평등 2016』(페이퍼로드, 2016).

2) 논문

강상중,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장지리를 넘어서,” 『공간: 아시아를 묻는다』(서울: 한울, 2007).

김민환·정현욱,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제21권 3호(2014).

김종엽, “지구적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교육개혁의 길,” 『창작과비평』, 통권173호(2016), 101쪽.

더글러스, 마이크(Mike Douglass), “동아시아 지역내 지구화되는 도시와 경계초월 도시 네트워크: 부산-후쿠오카 ‘공동생활구역’ 사례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2호(2011).

딜릭, 아리프(Arif Dirlik), “초국주의의 이론과 실천: 활용, 오용, 남용,” 『도시인문학연구』, 제 2권 2호(2010).

토이플, 니콜라이(Nicolai Toifl), “역사의 상처에서 새로운 유럽의 실험장으로: 독일-폴란드 사례로 보는 ‘두 개의 한국,’”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2016).

박명규, “양안에서 바라본 통일과 평화,”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서

을: 진인진, 2016).

박배균, “동아시아 접경지역 경제특구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2016).

_____,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 2호(2017).

우권광(吳俊芳), “소삼통 이후 ‘진사생활권’의 복원,”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서울: 진인진, 2016).

이승욱,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제26권 2호(2016).

정은미, “삼통으로 본 양안과 남북,”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서울: 진인진, 2016).

한우석, “전쟁터에서 평화의 섬으로, 대만 금문도,” 『국토』, 통권 308호(2011).

2. 국외 자료

1) 단행본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Taylor, Peter and Ben Derudder, *2004 World City Network: A Global Urban Analysis* (London: Routledge, 2004).

2) 논문

Jacobs, Jane, “Cities First-Rural Development Later,” *The Economy of Cities*(New York: Random House, 1969), pp.3~48.

Taylor, Peter, “World cities and territorial states under conditions of contemporary globalization,” *Political Geography*, Vol.19(2000), pp.5~32.

Towards Trans-Border Urban Networks in Korean Peninsular

Nam, Youngho(Shinhan University)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 has been considered either a path towards Korea's Unification through enhancement of peace or aiding North Korea's military power through pumping up money. However,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rans-border urban networks between the two Korea as a survival strategy in the age of neo-development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ization, the city was originated as a network, and in East Asia miraculous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based upon urban network. Recently, many regions in East Asia are trying to make further advancement through forming urban networks across the territory of individual nation-state. As more wealth and capital has been spatially concentrated into select Global City or World City, trans-border networks in Korea may be a survival strategy.

Keywords: Korean peninsular, city, trans-border, urban networks, East Asia